

가족정책 국내동향

2024년 4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주요 현안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미디어역량교육' 지원
- ▶ 한부모가족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
-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 추진 대책 수립
-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3년 하반기 핵심과제 추진 현황 점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3.2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8&bbtSn=709877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현황 점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3.2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8&bbtSn=709878

결혼이민자 직업역량개발, 가족센터에서 시작하세요!

- ▶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3.2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8&bbtSn=709891

모든 가족을 든든하게, '온가족보듬사업' 지원 강화 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3.2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8&bbtSn=709891

홀로 남은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대책은 미흡'

[경기일보, 오민주 기자, '24.04.02']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401580298>

"고시원 사는 청년도 1인가구로 지원"... 국민통합위 정책 제안

[세계일보, 박은산 기자, '24.04.05']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05507475?OutUrl=naver>

공무원 육아시간 5세→8세까지 확대... 초2 부모도 2시간 단축 근무

[연합뉴스, 박민서 기자, '24.04.08']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805500001?input=1195m>

'1인 세대 1천만 시대'... 5세대 중 2세대 이상 혼자 산다

[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24.04.09']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9124100530?input=1195m>

1인가구 급증 속 생활용품 대여 인기

[KTV, '24.04.11']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99106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 ▶ 전국 12,0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4.1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8&bbtSn=709904

가족관련 법안 동향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 구분 | 계류법안(발의자) | 제안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 가족 생활·돌봄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 2024-03-26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을 아동복지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한 경우 자녀가 한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지 않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 우선입주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지적받고 있음. 또한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임주를 신청하더라도 장기간 입주대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 자녀를 보육원 등에 맡기는 경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입주 전에 일정 기간 함께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임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

가족정책 관련 영상

YOUTUBE



고립·은둔청소년 일상 회복 지원

<https://www.youtube.com/shorts/RXAZmbfb>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https://www.youtube.com/shorts/0RVIRt39FE>

가족관련 연구 동향

| 사회구분 | 연구명 | 주요내용 | 참고자료 |
|---------|--------------------------------------|--|--|
| | 가정 내 폭력 재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 | 가정 내 구성원이 다른 가정 내 구성원에 의해 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다른 가정 내 구성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통합된 지원과 정보 연계 방안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외국 정책 사례 검토,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종사자 대상 조점면접을 통해 통합적 지원이나 정보 연계에서의 필요성 및 어려움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일련화된 핫라인의 활용, 국가 위기가정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음. | 『KWDI 이슈페이퍼, 2023. 12.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uePaperView.do?p=1&idx=131861 |
|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정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함. 아동·장애인의 실종과 관련한 정책 관심은 특정 사건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지속되기 어려워, 실종에 대한 제도적 관심 제고와 함께 보호·지원 체계 개선과 방향성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실종아동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수행 체계에서 세부 지원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성이 서로 다른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관리하는 이들 기관의 실종 관련 협력 수행을 증합·조정하는 것에 더해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46호 (2024-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was.re.kr/publish/regular/hsv/view?seq=61361 |
| 사회통합 위기 | 거주시설 노인의 인권 보장 현황 및 과제 | 장기요양등급자가 입소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일상생활과 질병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적 특수성을 가진다. 요양시설에서 거주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노인 인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이 필요한 정책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인 자기결정권 보장 실태와 요구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조사는 요양시설 거주 노인에 대한 직접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시설장 대상 온라인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시설 운영 특성, 입소 생활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가족과 지역사회 참여를 주요 주제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시설에서 거주자가 자기결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했다. | 『보건복지포럼, 2024. 03. No.329.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was.re.kr/publish/regular/hsv/view?seq=60912&volume=60906 |
| | 팬데믹 전후 사회적 고립의 생애주기별 현황과 정책적 함의 | 이 글은 사회적 고립이 팬데믹 전후에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했는지 생애주기에 따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사회적 고립은 팬데믹 동안 심화되었다. 팬데믹이 완화된 2023년에 사회적 고립은 생애주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고립된 청년의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2021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고립된 노인의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오히려 더 증가했다. 은둔형 청소년,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위험군으로서 중장년,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공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생애주기를 유연하게 잇는다면 고립된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지지체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포럼, 2024. 03. No.329.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was.re.kr/publish/regular/hsv/view?seq=60918&volume=60906 |
| |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화 및 전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다양한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유형화하고, 시간에 흐름에 따른 변화와 영향요인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난피해자의 10% 정도는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재난 유형, 연령, 소득, 회복탄력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재난피해자를 위해서 UP프로토콜 프로그램, 트라우마 기반 케어(TIC)와 같이 효과가 입증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 |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ci.go.kr/kiportal/landing/article.kci?arti=KCIPT03070763 |
| 가족·돌봄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에 대한 유형화와 지원 방향 | 장애인 가족이 느끼는 돌봄 부담은 심리·사회·경제적 부담을 포괄하는 것임. 이 글에서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Q방 방법을 통해 유형화하고 유형별 돌봄 부담의 영향을 제시함.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은 '능동적 대처형', '자녀 장래 고민형', '지원 촉구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공통되거나 유형화할 수 있는 돌봄 부담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함. 첫째, 장애인 돌봄 가족원의 건강을 점검·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둘째, 장애인 가족 서비스의 보편적 지원 및 위기 대응 지원이 필요함. 셋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 대처 방안이 필요함. 넷째, 장애 자녀의 자립에 대한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45호 (2024-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x.doi.org/10.15709/hsvr.2024.44.1.121 |
| | 가족변화에 따른 사적 부양제도 정비 방향 | 우리 사회는 개인화와 가족 다양성 및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족 부양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가족변화에 대한 대응은 공적 부양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져 왔으나 사적 부양제도는 민법 제정 이래 후자의 가족부양을 폐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경사회 대가족 제도에 토대를 둔 친족 부양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에 이 연구는 통계 자료 등을 통해 가족변화 및 부양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상 부양제도와 현실의 부정합, 그리고 가족 부양 이슈를 고찰하고, 외국 부양 관련 법적 현황 및 시사점을 토대로 가족변화에 대응한 사적 부양제도의 방향 및 정비 과제를 모색하였음. | 『KWDI 이슈페이퍼, 2023. 11. 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uePaperView.do?p=1&idx=131861 |